

정부 재정 '인구밀집지역' 치중...더 멀어진 지역균형발전

국특회계 3년 한시 보전 재정력 취약 전남 등에 불리
문재인정부 3년 국고보조금 광주·전남 소외

국민 모두 평등한 서비스 위해 낙후지역 우선 지원해야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걸고,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직접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분권에 대해 전남을 비롯한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6개 도(道)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지역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의 지방 이양과 그 재원의 3년간 한시 보전은 재정력이 취약한 전남 등의 이양 사업 중단 및 축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전히 '낙후지역'보다 '인구밀집지역'에 치중하는 정부 재정-광주일보 7개 특·광역시, 17개의 특별자치시, 9개의 도(道) 등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국고

보조금 자료 등을 토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지자체의 세입 예산을 분석했다. (표 참조)

광역지자체별로 세입 예산은 크게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기타(지방채, 보전수입 등)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재정 지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의 인구 규모, 경제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의 변동폭이 커졌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얼마나 재정을 나눠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에 포함시켰다. 보조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지방세의 지원 규모 추이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낮을수록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높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광주·전남·전북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4180억원, 3090억원이 증가했다.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서울(1조4449억원), 부산(8123억원), 인천(7465억원), 대구(5344억원)에 이어 5번째였다. 대전과 울

지역별 국고보조금 증가액

(단위:억원)

구분	2016~2018년	2018~2020년
서울	6,098(5조6,023)	1조4,449(3조9,593)
부산	4,160(6,730)	8,123(1조5,695)
대구	3,080(5,202)	5,344(9,761)
인천	2,596(1조2,036)	7,465(1조89)
광주	1,475(5,239)	4,180(9,029)
대전	1,669(5,769)	3,373(7,906)
울산	1,007(3,125)	2,426(4,988)
경기	8,408(3조1,178)	2조5,455(4조3,841)
전남	2,172(3,364)	3,090(1조3,590)
전북	3,172(6,221)	3,239(1조1,028)
경남	2,752(5,455)	9,841(1조7,910)
경북	1,282(3,699)	4,645(1조4,847)
충남	3,539(8,412)	4,390(1조1,616)
충북	1,371(3,154)	3,924(8,676)
강원	-2,429(1,988)	3,655(9,406)
제주	225(6,982)	2,000(2,409)

※()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세 포함 증가액

산의 증가액은 각각 3373억원, 2426억원이었다. 9개 도(道)에서 전남은 경기(2조5455억원), 경남(9841억원), 경북(4645억원), 충남(4038억원), 충북(3924억원), 강원(3655억원), 전북(3239억원)에 이어 8번째였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까지 합쳐서 살펴보면 광주는 9029억원으로 여전히 5번째인데 반해 전남은 1조3590억원으로 경기(4조3841억원), 경남(1조7910억원), 경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오전 진도군 의신면 솔비치진도에서 열린 제25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1조4847억원)에 이어 4번째로 올라섰다. 전남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특회계의 절반이 지방세(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과거의 기준대로 이를 보전받으면서 간신히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국특회계가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3년간 한시보전(2020~2022) 기간이 끝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여전히 지역 낙후도가 아닌 인구 밀집과 경제성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은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6~2018년에 비해 재정 지원 큰 폭 증가-낙후지역 배려 계속돼야-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3년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6~2018년 광주와 전남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액은 각각 1475억원, 2172억원에 그쳤다. 광주는 대전(1669억원)보다 전남은 충남(3253억원), 전북(3172억원)보다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에 지방교부세, 지방세를 포함해도 광주는 같은 기간 5239억원, 전남은 3364억원이 증가한데 반해 대전은 5769억원, 전북은 6221억원, 충남은 6352억원 급증하는 등

광주·전남은 소외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단체인장, 지역국회의원 등이 총력을 다해 지원액을 대폭 늘렸지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과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재정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균형보다는 균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양림동 펥귤마을, 공예특화 거리로 재탄생

11개 공방 입주...판매장 운영

옛 골목의 정취가 가득한 광주 남구 양림동 펥귤마을이 레트로 감성을 입힌 공예 특화거리로 재탄생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남구는 지난 5일 양림동 펥귤 마을에서 기념식을 하고 공예 특화 거리를 개장했다.

시와 남구는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낡은 가옥 20여 채를 리모델링했다. 거리에는 11개 공방이 입주해 판매장을 운영하며 체험관, 전시장, MBC 오픈스튜디오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공방에서는 섬유, 목공, 도자, 금속 등을 소재로 한 공예품을 관광객이 직접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예아카데미 및 어린이체험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MBC 오픈스튜디오는 라디오 생방송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5일 양림동 펥귤마을에서 열린 공예특화거리 개장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입주 공방과 판매·체험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및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돼 관광객이 생방송을 직접 관람하고 이벤트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정오의 희망곡 박해립입니다' (오후 2~4시)가, 수·금요일까지는 '놀라운 세시' (오후 3~4시)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양림동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로 기록과 선교문화자원 및 근현대 건축물이 현존하고 김현승·정율성 등 많은 문화에

술인을 배출한 곳이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의 핫플레이스인 양림동 펥귤마을이 공예특화거리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광주공예산업이 발전하는 터전 마련은 물론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이 가진 풍부한 볼거리와 어우러져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체험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문재인 대통령 "독립군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

문대통령 퇴임후 양산 평산마을로 사저 부지 10억 6천만원에 매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흥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이날 SNS에 글을 남겨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민 방문 당시 흥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협조를 약속해 양측이 실무협의를 해 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흥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며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고양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며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동력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 마을에서 지내기로 하고 최근 새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호처가 현재의 양산 매곡동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들인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630.5㎡(795.6평) 규모의 대지다. 대한민국 3대 사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산 통도사는 10여분 정도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까지는 자가용으로 50여분 거리로 멀지 않다.

부지 가격은 10억6401만원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당시 예금만 총 16억4천900만원을 갖고 있어 매입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집값은 새 사저보다 매곡동 자택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며 매곡동 자택을 처분하면 새 사저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도 이번에 경호시설을 위한 부지(1124㎡)를 매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